

위성정당 없애고 지구당 부활 공감대 송영길·이준석 대표 정치개혁 ‘물꼬’

여야 선거법 개정 방향성 동의
“즉시” “대선 이후” 시기는 이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2일 회동 결과에 따르면 양당 대표가 공유한 선거법 개정 방향은 크게 연동형 비례제 폐지와 지구당 부활 논의가 골자다. 연동형 비례제 개정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 해결과 맞닿아있다. 당초 사표(死漂)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제도 개정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견해가 엇갈려 실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뜻을 함께한 만큼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 민생 현안을 들어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작년 정개혁위에서 논의의 속도에 주력하느라 위성정당의 후폭풍을 계산하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잘못 설계됐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법 정비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출신인 초선 비례대표 전원 명의로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폐습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정국인 이 시점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대선 이후에 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하게 여유를 갖고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여당발 정치개혁 논의 제안에 대한 야당의 이 같은 반응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로 주의를 돌려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지구당 부활 문제에 관해서도 여야는 비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등 명칭의 조직을 꾸리고 있지만 원외 인사는 지구당 시절과는 달리 여러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배지를 못 달면 자신의 지역에서 사무실도 못 내도록 막아 놓은 게 벌써 17년이 지났다”며 “그간 정치제도·문화가 개선돼 금권선거가 발 디딜 틈이 좁아진 만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의 당협에서 가장 절실하게 고려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 중인 원외 당협 활동을 합법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인 조치는 검토해볼 만하다”며 가능성을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강화를 위한 ‘원외 배려’ 차원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장외행보…중도 확장 못하고 보수만 결집

검증 취약·정치 비전 부재

진보·중도층 지지율 크게 하락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빅텐트’ 시도가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중도에 반문 정서가 강한 진보까지 전부 자기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야심만만함을 미루고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보수 결집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다.

강성 보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 메시지와 유권자 타깃이 불분명한 즉흥적 ‘식사 정치’가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13일 통화에서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무당층과 중도층이 그의 메시지와 행보에서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냈고, 정치 비전도 부재했다”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보기 드문 대권 주자”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의 윤 전 총장 선택은 지난달 28일 38.9%에서 전월 34.5%로 눈에 띄게 줄었다. 진보층도 11.2%에서 8.7%로 하락,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수층내 지지율은 43.7%에서 46.2%로 더 늘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 의견부터 듣겠다”며 민생 행보에 나섰지만, 매 일정마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주로 집중하면서 정책 역량이 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캠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지층이 여권으로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깔고 움직이기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려는 ‘전략 부재의 전략’을 놓고 캠프 내에서도 점차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개호,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 해결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3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기준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식품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농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허용되었던 농지에 설치된 기숙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 채소 농가등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는데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차원에서 이런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준석 한달만에 빠졌…리스크 현실화? 당내 불만 봇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 반발

여가부·통일부 폐지론도 도마에

‘이준석 신드롬’이라는 순풍을 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12일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달력 합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주장이 수용된 것을 전제로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합의였다고 주위 담으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은 벌집 쑤신 상황이 됐다.

당장 “실망스러운 판단”(원희룡 제주지사), “제왕적 당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다.”(윤희숙 의원),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조해진 의원) 등 공개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추경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 없이 1시간 15분 동안 이뤄진 회동만으로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대폭 손질한 것은 ‘불통 리더십’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체제는 당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추경은 원내대표의 소관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면 위로 불거진 반발이 단순히 ‘재난지원금’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전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잔인함’(cruelty)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하면 중국대사 면전에서 홍풍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전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시선이 당 안팎에서 새어 나왔다.

앞서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띄운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도 디테일과 신중함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여가부 폐지는 젠더 이슈와 맞물려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당 지도부와 세부 조율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서삼석 “농식품부 영터리 통제로 농가 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헥타르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농가 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 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헥타르 농사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청 농어업 통계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재이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